

#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 체계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김학만\*\* 우송대학교

권정만\*\*\* 충남대학교

---

## 논문 요약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보편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재구축 및 재모색하여 경제충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과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보장의 역할과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및 재구축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았다.

**주제어 :**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

---

\* 이 논문은 2020년도 우송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교신저자      \*\*\* 주저자

## I. 문제제기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며<sup>1)</sup>, 그 충격은 경제사회적 취약집단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등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경험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약 2~4개월 사이에 그 충격이 표면화될 수 있다. 이미 노출된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쳐버렸다는 점에서 각종 정부의 지원 대책이 서둘러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생산과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가해져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될 위험성이다. 코로나 19는 세계가 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잘 보여 주었다.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긴급소득지원으로는 그 충격을 흡수하기 힘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과 치료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 및 N차 확산에 대비해 공공의료 및 보건체계를 정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난적 수준에서 받게 될 경제충격을 완하기 위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업자 지원 대

---

1) 부연하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후 급속하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확진자 발생 상황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과 어려운 서민의 경제생활은 일파만파로 위축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계 종사자 등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무급휴가나 급여를 삭감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19 감염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고 우리 사회 각 영역 또한 정부 대응 흐름에 맞추어 각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19가 더욱 더 확산된 상황이며,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과 혼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은 신속하고 파격적인 규모로 집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4월 총선과 맞물려 시작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실현되었고, 더 나아가, 2차 긴급재난소득과 기본소득과 관련된 활발한 논쟁과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틀을 넘어 전 국민을 보호할 새로운 정책적 발상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현재의 사회보장제도가 ‘더 자주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앞에서 특히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 형태고용 종사자,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 실업자와 고령층 실업자 등이 보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향후 사회복지정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회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향후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사회복지정책의 논의로,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적 관점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에 대한 수정 보완적 아이디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관심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시간적 요소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코로나 19 사태에 이후 새로운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로 사회복지정책 체계와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로 시간적 요소의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 관련 선행

연구와 사회복지 체계 그리고 시간적 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정치권의 논의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개와 관련 쟁점을 위주로 다른 연구(김병조 2020; 김정목 2020; 배재현·박영원 2020) 등이 있다. 그리고, 긴급재난 소득 논의를 확장해서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노대명(2020)의 연구가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제도에 대한 소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긴급재난소득 논의로 확대하는 연구가 있으나, 제도적 차원의 관심에 집중하고, 본 연구의 관심인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 즉 분석틀에 대한 거시적 관심은 미흡하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체계는 김학만외 3인(200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 실천의 체계에 따라 살펴보면 사회보험정책, 공공부조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관련 복지정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의 이를 기본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정책의 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적 요소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이미 행정학에서 이론적 및 인접이론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각종 정책 및 사례에 일부 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들이 있어 왔고, 더 나아가 다양한 시간적 요소를 확장해 왔다. 사례연구를 연구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초기 연구는 환경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인사 분야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점차 연구 분야가 확대되어, 조직 분야, 도시 및 지방행정 분야, 보건·환경·문화 분야, 농업·임업 분야, 정보·통신 분야, 교육 분야, 갈등조정이론, 기타 허가제와 중소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홍성수 2016,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시간적 요소의 구성요소를 두고 있지 않기도 하거니와 학자들의 관심에서도 부족하여 시간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방법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 즉 분석틀에 대한 거시적 관심과 시간적 요소에 대한 논의의 미흡함을 극

복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의 문헌고찰 및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사태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역할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과정 및 논의 등 그 현황을 살피고,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재구성에 대한 제언을 보고자 한다.

## 2. 코로나 19 사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코로나 19 사태에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제도는 문제해결자로서 그 역할과 기대가 높고, 나름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 19는 생존과 감염의 두려움을 번갈아 오가는 이들의 고통을 통해 복지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열악한 우리 사회적 안전망은 재난 상황을 더 고통스럽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필요했을 사회시스템은 정작 작동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19사태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와 소외 계층의 삶은 기존 복지체계의 불충분성, 불평등성, 불형평성에 기인한다. 코로나 19가 가까스로 진정되어 가는 마당에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은 복지 제도의 근원적인 속성에 대한 반추(反芻)이다. 오랜 구조적 불평등, 불형평은 새로운 시대에 자리 잡아야 할 국가 운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언제나 최악의 피해를 보는 취약 계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복지 체계의 변화를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많은 NGO와 시민단체는 현재에도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과 같은 취약 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정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시민건강연구소 2020).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얻은 답 중 하나는 우리 사회 취약 계층에 그간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여러 수준과 영역의 단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함께 전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 영역은 생활 방역 체계의 마련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위해 서서히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

으면서 수많은 복지 공백을 목격했다. 감염병의 일상화 시대 복지 역할을 조망하고 복지 현장에 따른 맞춤형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 부문 대응을 위해서는 개인과 개별 차원의 실천을 넘어 재난 속에 벌어진 복지 공백의 실상을 자세히 알고 복지환경실태와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에서부터 새로운 방안 도출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sup>2)</sup>

### 3.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론적 논의: 효과와 논쟁

#### 1) 긴급정부재난지원금의 효과<sup>3)</sup> :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 모형

2020년 5월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실제 빠른 속도로 실물 소비까지 이어졌다. 먼저, 지급 및 사용 현황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2일까지 지급을 완료한 재난지원금 총액은 13조 5,158억원으로 이 중 9조 5,866억원(71%)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다. 행정안전부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 중 64%가 이미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지급액의 절반이 넘는 소비가 되고, 재난지원금은 2020년 6월 4일 기준 지급대상 가구 중 99%에 지급됐다.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2020년 5월 셋째 주(11~17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을 회복했고 2020년 5월 넷째 주(18~24일)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 신한카드가 집계한 경기도 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매출 현황에 따르면

2) 특히, 사안전망 강화, 지역사회돌봄체계 구축 추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상적인 재난복지체계구축, 재난관리 거버넌스 주체로서 시민사회의 재발견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하지선 2020, 38-40).

3) 세계일보, “소비증대vs재정안정, 불붙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2020/06/06.; <http://m.segye.com/view/20200605512774> 참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시작한 2020년 4월 22~28일 가맹점의 매출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쟁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으로 정리하면 (김병조 2020; 배재현·박영원 2020), ① 재원: 재난기본소득 실행의 핵심은 예산 확보의 문제, ② 지원의 성격: 재난기본소득인가, 재난지원금인가와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정책이나, ③ 지급대상 및 전달방법, 시기(회기): 국민이나, 시민이나와 현금이나, 지역화폐이나, 현물이나와 일시불이나 분할지급이나, 기부 권장, ④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다.

이와 같이, 많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논쟁 및 한계, 쟁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노대명 2020, 76-78).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잔여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중산층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지난 20년간 사회보장제도 확장 과정에서 중산층들은 자신의 조세 부담에 비해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물론 주관적 판단과 객관적 현실은 다르다. 생애주기별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연령층이 있듯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연령층이 있다. 근로연령층은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만 현금지원보다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노령층이 되면 그에 준하는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일회성 현금지원이 갖는 유인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잘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감이다.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기 힘든 현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인 썸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실직과 빈곤

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회보장제도는 그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물론 기존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업자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위기 이후 소득보장제도를 개편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자세이다.

셋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자산조사의 최소화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사회에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따라, 지난 10년간 자산조사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이 강화되어 왔으며, 부정수급 문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자산조사가 가능한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자산조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자산조사를 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비중은 자동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 점에서 보편적 사회 보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자산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자산조사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 또한 필요하다. 최근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먼저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뒤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4)</sup> 우리 사회보장제도 또한 내용적으로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와 조세행정데이터를 연계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4) 서구 복지국가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복지급여 등을 지원한 후,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에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다.



### Ⅲ. 코로나 19와 정부 대책 및 긴급재난지원금

#### 1.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대책

우리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과 치료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부문에서 소상공인과 실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해 왔다(노대명 2020, 73-74). 정부는 2020년 3월 18일 업종별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 방안’, 3월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유동성 지원과 대출 보증, 원금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월 25일 수출입·해외수출 기업 긴급금융지원과 고용유지 지원금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 19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조치의 내용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관계부처합동 2020a). 그 밖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을 유예하는 조치 등이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약 1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그 중 11조 원은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 2020b).

구체적으로 실업과 빈곤 문제와 관련된 대책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3월 24일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에게 3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고, 3월 25일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및 휴직 수당)을 지급액의 90%까지 4월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용노동부 2020).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25일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 일자리 참여자 54만 명에게 4월부터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원 금액

은 아동에게는 40만원, 저소득층에는 가구 규모에 따라 40만~52만원, 노인에게는 현금으로는 27만 원, 현금과 상품권 동시 수령 시 32만 9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대책에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가구를 지칭한다(보건복지부 2020).

## 2.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논의

이 중,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현금지원 대책이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으나, 이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전국민 지급 방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26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2020년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다.

관련 법적 근거는 2004년 처음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재난상황에서 국민에게 생계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규정에 기초하고 있다(김정목 2020, 12).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민간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차원에서 형성된 제안과 청와대 국민청원<sup>5)</sup>을 계기로 정치권으로 확대되어 정부가 3월 30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4월 16일에는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한 7조 6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2회 추경안’을 의

5) 이재웅 쏘카 대표는 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국회가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함에 따라 2020년 5월 전 국민에게 현금,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정치권에서 핵심 의제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2차 지급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정책 체계 및 구성요소의 재조정 논의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표 1>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일자별 주요 논의 정리표

논의 주요 주체	주요 논의 내용	일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고 경기도 도의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착수하였다.	2020.3.6
김경수 경남도 지사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서 제안하였다.	2020.3.8
청와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장등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0.3.9
전북 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1인당 52만 7천원, 총250억 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3.13

정부 (기재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2020.3.30
정부 (기재부)	코로나 19 재원 마련 위한 2차 추경 국회 제출	2020.4.16
더불어 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에게 70% 지급이나, 100% 지급 관련 정치권 논의	2020년 4월 중순경
정부 기획재정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추진 공식 발표	2020.4.23
국회	12조 2,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 통과	2020.4.30
이재명 경기도지사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 발의 (정부 건의)	2020.6.2
권영진 대구시장	긴급생계지원금 2차 지급 방안 검토	2020.6.10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2020.6.16

출처 : 배재현·박영원, 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2831&cid=43667&categoryId=43667>,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한편,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 외에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대책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재난기본소득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 시점까지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래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 자치단체의 소득지원 대책은 제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외에 재난 긴급생활비, 긴급생계자금, 긴급재산소득, 긴급복지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이 표는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단위, 지원 범위, 선정 기준,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지원 횟수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대책은 지원 횟수를 제외하고는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지적하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지원 대상을

중산층 이하로 한정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실업자에 초점을 두는 선별적 접근과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이 공존하고 있다. 지원 단위 또한 가구와 개인이 병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와 위험 유형(실업이나 매출 감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공존하고, 소득 기준의 수준 또한 기준중위소득의 75%부터 100%까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지원 금액도 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지원 방식도 현금부터 선불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시도별 주요 긴급재난지원금 현황

지역	지원명칭 (재원)	지원대상 (할당)	지원액수 (급여)	지급방법 (전달)	시기 (신청기간)
서울	재난긴급 생계비	중 위 소 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 ~50만원	서울사랑상품 권, 선불카드 중 택일	2020.3. 30.~5.15
경기	재난기본 소득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	경기지역화폐카 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2 가지 방식	2020.4. 20.~7.31
	재난긴급 생계비	기 준 중 위 소 득 100%이하	가구당 50만원		
대구	재난긴급 생계비	기 준 중 위 소 득 100%이하	가구당 50만 ~90만원	선불카드	2020.4.3. ~5.2
경북	재난긴급 생활비	기 준 중 위 소 득 85%이하	가구당 50만 ~80만원	선불카드 등	2020.4.1. ~4.29
	저소득층 생활비	기초수급자 등 34 만 7,000여 가구	가구마다 지 원액수 다름	지역화폐, 온 누리 상 품 권 중 택일	2020.3월 말경
인천	긴급재난 생계비	소득상위 30%가 구(정부 소득 하위 70% 제외 대상)	25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2020.4. 10.~5.25
강원	긴급 생활 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실직 자 등 30만명	40만원	선불카드	2020.4.1. ~5.15

대전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중 위 소 득 100%이하	가구당 30만 ~ 6 3 만 원 3,000만원	지역화폐카드	2020.4.6 ~5.31
세종	긴급재난 생계비	중 위 소 득 100%이하	-	시군별 자율 시행(여민전)	2020.4.2 7.~5.15
충남	긴급생활 안정자금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	지역사랑상품 권, 선불카드 중 택일	2020.4.6 ~4.24
충북	긴급재난 생활비	중 위 소 득 100%이하	가구당 40 만~60만원	현금	2020년 4월경
부산	긴급민생 지원금	소상공인 등 18 만 8,000가구	1인당 100만 원	선불카드	2020.4.6 ~6.5
경남	긴급재난 소득	중 위 소 득 100%이하	20만~50만원	경남사랑카드	2020년 4월~5월 경
전북	긴급지원금	학원 등 시설 1만 3,064곳	시설당 70만 원	지역사랑상품 권 등	2020.3.2 5~4.5
광주	3대 가계 긴급생계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30만~100만 원	광주상생카드	2020.4.1 ~5.8
전남	재난기본소득	중 위 소 득 100%이하	가구당 30 만~50만원	지역사랑상품 권 또는 선불 카드	2020.4.7 ~5.29
울산	재난긴급 생활비	중 위 소 득 100%이하	1인당 10만원	울산페이, 지 역은행 체크카 드 중 택일	2020년 3월 말경
제주	긴급재난 생활지원금 (1차)	중 위 소 득 100%이하	가구당 20만 원~50만원	현금	2020.4.2 0.~5.22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30505&cid=43667>,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IV. 코로나 19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재구조화 논의

### 1.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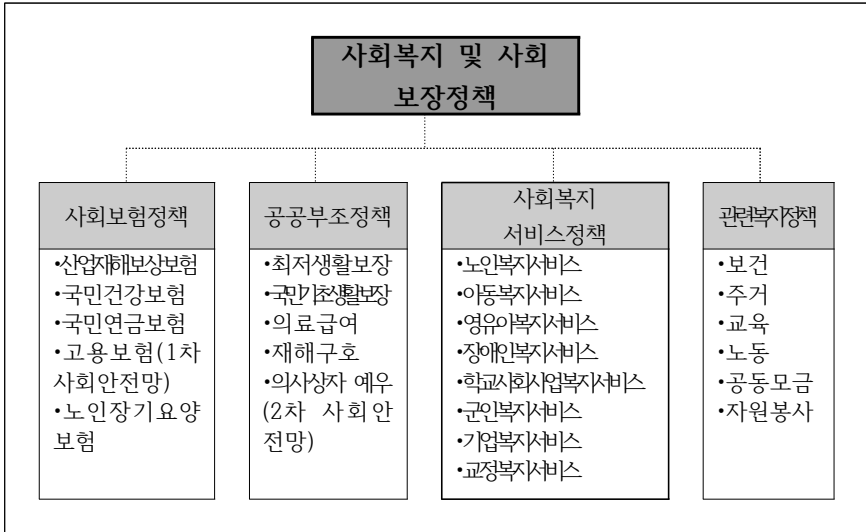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19사태는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위기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심지어 자유무역과 국제협력을 강조했던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코로나 19는 미국 등 특정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공의료와 소득보장제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와 사회보장 축소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한 안이한 대처가 초래한 참담한 결과가 그것이다. 더욱이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일부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사회연대의 모델마저 비틀거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기구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와 금융정책, 사회정책, 국제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Pezzini, 2020).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 보건의료정책에서 국제협력과 공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세계는 경제체계와 고용체계 그리고 사회보장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다(노대명 2020).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사회보장기본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 실천의 체계에 따라 도식화하여 정리해보면 <그림 1>과 같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학만의 3인 2005, 214).

<그림 1>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정책 체계도



출처 : (김학만 외 3인 2005, 214). 수정·보완

우선, 사회보장을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social risks)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위험을 분산(pooling of risks)시킴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한편,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관련복지정책은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연대성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정책과 특정 동종집단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운영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체계를 100% 통폐합하거나, 복지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중복된 제도를 조정하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또는 갑작스런 위기에 빠진 사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 설계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렇다고 기존 제도를 놔두고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얹기만 하면 국가재정이 망가지게 되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의 재편에 대한 논의를 점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여기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나타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 그리고 한국형 재난 수당을 기초로 하여 사회복지정책분석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노대명 2020, 78-80),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지출의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고용보험을 모든 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소득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있는 행정 데이터 연계 작업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형 재난 수당 도입에 대해 살펴보면(장영신 2020, 29-30),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재원은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추진체계로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국세청이 온라인으로 신청 받아 소득 기준을 확인한 후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신청시 지급대상자에게 환수 조치 동의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충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급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소득층을 제외하

고 개인 소득 300만원 미만, 부부 소득 500만원 미만 국민에게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모니터링해서 추가 지원 계획도 강구해야 한다.

##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하루 빨리 속도감 있게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위기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국민들이 이를 빠르게 필요한 곳에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김정목 2020, 13).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모험마다 강조점이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 유사한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구성요소를 모두 다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한계를 가지므로 그간의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1998)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구성요소를 제시해보면, ① 급여로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가?(급여형태), ② 누구에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대상), ③ 어떻게 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가?(전달체계), ④ 어떻게 재정이 충당될 것인가?(재정) 등이다.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의 논의를 통해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더 해, 시간적 요소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시급함과 절박함, 그리고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이에 따른 변화를 감지해야하는 시간적 요소(Timing: 시의 적절

성)에 대한 고민도 사회복지정책의 추가 구성요소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미 행정학에서는 이론적 및 인접이론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각종 정책 및 사례에 일부 이론을 적용한 사례연구들이 있어 왔고, 더 나아가 다양한 시간적 요소를 확장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시간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시간적 요소를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홍성수 2016, 60-69).

시간적 요소로는 ① 적시성, ② 시간 규범, ③ 숙성기간, ④ 변화의 속도와 안전성, ⑤ 인지 시차, ⑥ 시차적 변화 등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적시성은 제도의 내적인 제도 도입의 변경과 제도의 내용이 조화로운지, 조직적·인적·물적 등의 준비도와 제도의 외적인 구제도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 내적·외적 변화 요구 강도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도 내·외적 도입의 변경의 시기와 발단단계별(도입기, 성장기, 안정기) 추진전략이 적정한지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 시간 규범은 제도 내적인 제도 내용과의 적절성, 구성들의 시간 규범과의 적절성, 시간 규범 형성과의 적절성과 제도 외적인 구제도 시간 규범과의 적절성, 정부 내적·외적 시간 규범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여 제도에 반영된 시간 규범이나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시간 규범이 적절한지를 살핀다.

셋째, ‘숙성 기간’은 제도 내적 숙성으로 참여와 확산 수준, 조직, 법령, 제도 내용, 인프라, 인력 확보, 전문성 등과 제도 외적 숙성인 정부 내외적 호응도를 분석하여 제도가 도입된 후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과 안정기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이 적절한지를 살핀다. 이와 함께 시행 중인 정책의 경우 안정기 도달 여부를 점검한다.

넷째, ‘변화 속도와 안정성’은 제도 내적인 제도 내용의 자생력, 구성원의 수용도와 제도 외적 요인인 정책결정자의 의지 및 시간관념, 구제도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환경적 호응도 등을 분석하여 제도의 추진속도가 적정한지,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지를 살핀다.

다섯째, ‘인지 시차’는 정보 내용(정보오류, 정보의 상대적 차이)과 효율성, 민주성의 저해 등의 인지 시차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여, 인지 정보의

시차, 인지 시차의 시차, 인지 지속의 시차, 인지 시차 편견 등으로 인해 정보의 오류나 정보의 상대적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시차적 변화’는 문제 상태의 변화, 제도 내적인 조직, 법령, 정책수단, 인력확보, 전문성, 참여도, 예산, 공간 등과 제도 외적인 정부 내외적인 변화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단(원인변수)과 정책목표(결과변수) 달성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흐름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이러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제도 내적·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이상 여섯 가지 시간적 요소를 ‘분석을 위한 질문’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간적 요소의 분석 요소와 분석을 위한 주요 내용

시간적 요소의 분석요소	분석을 위한 주요 내용
적시성	▶ 제도 도입(변경)시기 및 단계별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시간규범	▶ 시간 규범의 설정은 적절한가?
숙성기간	▶ 숙성 기간 예측과 안정기 도달 전략은 적정한가?
변화와 속도와 안정성	▶ 변화 속도는 적정하며,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가?
인지 시차	▶ 인지 시차로 인한 정보의 오류나 차이는 없는가?
시차적 변화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출처 : (홍성수 2016, 61).

시간적 요소의 분석틀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적용할 경우 도입, 전개과정, 그리고 지속가능성, 그리고 변화 속도, 인지 시차(정보의 오류나 차이), 전개과정상의 변화 등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책수립자가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가의 대응 정책이 출현한 시점까지 관련 법, 계획, 대책, 예산 등의 대응책이 수립된 때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기존에는 단순히 도입 및 논의 과정에 대한 정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제도 도입부터 집행의 각 단계에서 시기가 만약 지연된다면,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민 생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시간적 요인의 미흡함이 발생하게 된다. 무엇보다 정책을 시행할 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하기까지 정책결정자들의 시간적 요소 중 속도는 시차를 발생시킨다. 인지시차가 길어지면, 재난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인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정책을 어느 시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시성(timing)이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국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시간적 요소로 분석하고 설명할 때, 정책관련자들의 지식과 환경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시차적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적 관점과 구성요소, 즉 체계의 변화 논의의 필요성과 구성요소로 시간적 요인에 대한 추가 보완 등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구축과 한국형 재난 수당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체계 변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안일 뿐이고, 세부적인 정책이나 제도로서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로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시간적 요소의 중요성과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세부적인 구체적인 시간적 요소를 두고 분석한 연구를 하지 못함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변화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도의 세부적인 검토와 시간적 요소를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로 두고 하는 사례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0.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보도자료 (2020/3/24)
- 관계부처합동. 2020a.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 보도자료 (2020/3/19).
- 관계부처합동. 2020b. “제2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보고.” 보도자료 (2020/3/24).
- 김병조. 2020. “지역화폐 연계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몇 가지 소고,” 『월간 공공정책』. Vol. 175.
- 김정목. 2020. “긴급재난지원금, 속도가 중요하다.” 『월간 한국노총』. Vol. 561.
- 김학만의 3인. 200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대왕사.
- 노대명. 2020.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281.
- 배재현·박영원. 2020.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제1674호.
- 보건복지부. 2020. “저소득층 230만 명, 아동 263만 명,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쿠폰 지원.” 보도자료 (2020/3/25).
- 시민건강연구소. 2020. “한국의 코로나 19 유행과 대응에 대한 한국 민중건강운동 성명서.” (2020/3/19).
- 장영신.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재난수당’ 지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슈페이퍼』. 제8호.
- 조권중 외 2인. 2017.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 : 서울연구원.
- 홍성수. 2016. “시차이론을 적용한 입학사정관제 정책과정 분석.”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Gilbert, N. & Specht, H. 1986.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New Jersey: Prentice-Hall.
- Gilbert, N. & Terrell, P. 1998.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Allyn and Bacon.
- Pezzini, M. (2020). Covid-19: Time to unleash the pow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ECD Development matters. 26

March 2020. <https://oecd-development-matters.org/2020/03/26/covid-19-time-to-unleash-the-power-of-international-co-operation/>에서 2020/3/31. 인출.

[http://www.hangyo.com/news/article\\_print.html?no=91059](http://www.hangyo.com/news/article_print.html?no=91059) “코로나 불경기...경제학자들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최종검색일 : 2020/04/06)

<http://m.segye.com/view/20200605512774> “소비증대” vs “재정안정” 불붙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최종검색일 : 2020/06/0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7123&ref=A> “인크루트” 기업들 코로나19 대처로 무급휴가 6%·급여삭감 2% 실시 (최종검색일 : 2020/03/09)

네이버시사상식사전(<https://terms.naver.com/>)

투고일 : 2020년 6월 28일 . 심사일 : 2020년 7월 20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7월 27일

\* 김학만은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과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행정이며,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저출산 고령사회의 복지정책』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다.

\* 권정만은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를 취득하고, 행정철학(행정 개념사), 복지, 도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Abstract >

Discussions on changes in social welfare policies  
after the Corona 19 Incident : Focusing on system  
and components

Kim, Hak-man

(Woosong University)

Kwon, Jeong-ma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is Corona-19 inciden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elicit specific discussions and social consensus on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It is necessary to rebuild and re-establish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universal and strong social security policy so that it can improve not only the economic shock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after the actual Corona -19 crisi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ing to Corona-19, and in particular,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In addition, the role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guarantees and new discussions and re-establishment will be examined. In particular, among the many issues and discussions related to emergency disaster funding, discussions were made to meet the role expectations of social welfare and security policies through discussions and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Keywords** : Corona-19,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ies.